

☉ 지방전문대 서울에

**'편법 분교' 개설 진상조사**

지방 전문대가 실습장 형태로 서울 시내에 사실상의 분교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나 교육인적자원부가 실태파악에 나섰다.

현행 교육관련법은 산업체위탁 교육 외에는 지방대학이 수도권에 별도의 교육시설을 두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권진수 교육인적자원부 전문대학지원과장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직업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연계운영은 가능하지만, 수도권 고교 졸업생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4월 말까지 전문대학들이 사실상의 분교를 수도권에 설치했는지를 알아본 뒤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 윤덕홍 부총리 '現 대입제도 2005년까지 유지'

윤덕홍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현행 대학 입시의 기본적인 틀을 오는 2005년까지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부총리는 3월 13일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 협의회에 참석해 "장관이 바뀌었다고 제도가 바뀌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제하고 "현재의 입시제도는 적

어도 오는 2005년까지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부총리는 그러나 "하나도 안 고친다고는 볼 수 없으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구상하겠다."고 밝혀 부분적인 입시제도 개선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부총리는 위기의 지방대 육성방안에 대하여 "지방대 문제는 교육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구조 전반에 걸친 문제"라며 "교육인적자원부는 물론 정부의 전 부서가 힘을 합쳐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대학·성인 교육시장 개방

정부는 고등(대학)·성인교육 시장을 개방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교육에 미치는 충격을 감안해 초·중등 교육은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3월 14일 "교육시장 개방폭은 최소화할 계획이며, 고등교육과 성인교육의 개방 수준은 다음 주 중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에 따라 교육 등 서비스 분야의 개방폭·방법을 담은 최초 양허안(개방 계획서)을 이 달 말까지 교역 상대국에 건네 줄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교육 관련 단체들은 "시장 개방은

교육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반발하며 서명운동을 벌이는 한편 3월 15일 서울에서 범국민대회를 열기로 했다. "교육은 공공재이지 상품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시장 개방의 폭 : 고등교육의 개방 수준은 1997년 이후 국내법에 따라 허용된 외국 대학의 국내 분교 설립을 이번 양허안에서 국제적으로 보장하는 선에 그칠 것으로 알려졌다. 성인교육의 경우도 기업 내 직업훈련 등에 외국 교육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미국, 호주는 ▶영리법인의 학교법인 설립 허용, ▶외국 분교의 이익금 본국 송금 허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4년 말까지 마무리 지어야 하는 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추가 개방 요구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 대학교수 민간기업 사외이사 겸직 가능

교육인적자원부는 3월 11일 교육공무원임용령이 개정 공포돼 대학 교수의 민간기업 사외이사 겸직이 대학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임용령은 대학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가 각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사외이사

를 검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시행규정은 학교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 ☞ 약대 6년제로 추진

약학대학을 6년제로 늘리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보건의료 전문지 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의 의료정책 방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약대 6년제를 굳이 마다할 필요가 없다."며 약사회가 주장해 온 6년제안을 수용할 뜻을 분명히 하였다. 이는 한의사들의 입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향후 한의사들의 강한 반발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 ☞ 교육개방 양허안 제출 유보

교육인적자원부는 3월 말로 예정된 세계무역기구(WTO) 교육개방 1차 양허안 제출과 관련, 제출유보 입장을 3월 21일 열리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밝히기로 했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3월 20일 "성인 및 고등교육 부문은 이미 개방돼 있어 양허해도 없을 것이 없다."면서 "그러나 교육단체 등의 반대가 있는만큼 일단 유보한 뒤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 양허 수준을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

부는 그 동안 초·중등교육 서비스부문은 공공성을 고려하여 개방하지 않기로 했으나 부정적인 영향 없이 우리 교육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고등·성인·기타 교육부문은 현행 개방 수준 범위 내에서 개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 ☞ 대입전형 협조사항 전달

2004학년도 입시부터 각 대학은 입학 전까지 합격자의 등록금 환불 요청이 있을 경우 전액 돌려주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3학년도 대입전형에서 발생한 문제점 개선 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대입전형 관련 협조사항'을 마련, 각 대학에 통보했다고 3월 18일 밝혔다. 서울지역 일부 사립대와 지방대는 합격생의 이탈 차단 등을 목적으로 정시 최종 등록 마감 1~2일 전 환불을 요구한 경우에도 등록금에서 10%를 공제한 뒤 돌려 줬 학생들의 반발을 사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등록금 납부 후 입학을 포기한 학생과 대학측의 환불 분쟁을 막기 위해 입학식 전이나 최소한 정시모집 최종 등록 마감 전에 환불을 요구하면 100% 환불하도록 모집요강에 명시하게 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또 수시추가합격자 발표 때 예비 순위별로 전화 및 e-메일

등을 통해 해당자에게 고지, 대학측의 예비합격자 일방적 발표에 따른 수험생 정시모집 지원기회 박탈 등 부작용을 줄이기로 했다. 이 밖에 인터넷 원서접수는 지난해 일부 대학이 마감일에 지원자가 폭주, 서버가 한 때 다운되는 등 혼란이 발생함에 따라 올 입시부터 창구접수보다 하루 일찍 시작해 하루 빨리 마치도록 했다.

### ☞ 'IT·비IT학과 교과과정 개편 지원사업' 60개 대학 선정

2003년도 정보통신부 'IT·비IT학과 교과과정개편 지원사업' 대상 학교로 고려대, 동국대, 동서대, 전남대 등 60개 대학이 최종 선정됐다. 정보통신부는 3월 13일 광운대, 대구기톨릭대, 서강대, 인제대, 창원대, 충북대, 한국외대, 한밭대 등 22개 대학, 경남정보대학, 동의공업대학, 서라벌대학 등 17개 전문대학 등 39개 대학을 IT학과 교과과정개편 지원사업 대상 대학으로 발표했다. 또 경일대, 국민대, 동명정보대, 서울대, 성균관대 등 21개 대학을 비IT학과 교과과정개편 지원사업 대학으로 선정했다. 동명정보대, 성균관대, 인천대 등 3개 대학은 IT와 비IT학과부문 모두 지원 대상 대학으로 선정

되어 눈길을 끌었다.

정보통신부는 이들 대학에 대해 IT 관련 교육·실습장비·소프트웨어 구입, 실습관련 교재·사이버 실습교재 개발에 총 1백 2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따라서 IT학과 교과과정개편 지원대학은 최고 3억 원 이내에서, 비IT학과 교과과정개편 지원대학은 1억5천만 원 이내에서 3등급으로 차등 지원된다.

'IT·비IT학과 교과과정개편 지원사업'은 정통부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이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IT학과 장비지원사업의 일환이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김영우 정보통신인력팀장은 "IT 관련 학과 교과과정을 기술변화와 시장 수요에 맞게 개편해 실습 및 프로젝트 중심으로 교육토록 지원, 실무능력을 겸비한 IT 전문인력 양성에 사업의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또 "비IT학과부문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 및 IT 접목 교과목을 개설토록 유도해 비IT의 IT화 촉진과 관련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선정 분야 및 대학은 다음과 같다.

※ IT학과 교과과정개편 지원사업 (대학)

강원대, 고려대, 광운대, 대구가톨릭대, 동국대, 동명정보대, 동서대, 상명대, 서강대, 서원대, 성균관대, 영남대, 인제대, 인천대, 전남대, 전주대, 창원대, 충북대, 한국산업기술대, 한국외국어대, 한밭대, 호서대 (이상 22개 대학)

※ 비IT학과 교과과정개편 지원사업 (대학)

경일대, 경주대, 경희대, 국민대, 남부대, 동명정보대, 동해대, 명지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세종대, 예원대, 인천대, 인하대, 중부대, 천안대, 충남대, 한경대, 한국항공대, 호남대 (이상 21개 대학)

### ☾ 성인교육 개방 명문화 - 교육개방안이 달 말 제출

정부가 논란 끝에 교육개방 1차 양허안(개방계획서)을 제출시킨인 3월 달 말까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일단 양허안 제출을 미루고 교육전문가·교육단체의 의견을 더 수렴한 뒤 개방 여부와 수준을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재정경제부·통상교섭본부 등의 개방 불가피론에 양보했다. 국내의 반발도 있으나 대외적인 신뢰를 감안해 결국 개방쪽으로 기울은 것이다.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이달 말까지 양허안을 제출하기로 국제적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국가신인도에 금이 간다는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육분야도 어느 형태로든 빗장을 열게 돼 앞으로 국내 교육환경·체질에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개방 수준은 향후 협상에 달려 : 정부는 이번에 제출할 양허안에 고등(대학)·성인교육 부분만 담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초·중등교육 개방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고등·성인교육도 국내법에 정해진 수준 이상의 개방은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현행 '고등교육법', '대학 설립·운영 규정' 등에 따라 ▶학교법인(비영리법인)만 대학을 설립할 수 있게 하고, ▶외국 분교의 이익금 본국 송금은 계속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외국에선 이보다 폭넓은 개방을 요구하고 있어 협상과정에서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수준 이상으로 각종 '제한'이 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국가 간 이견이 극심해 향후 협상이 간단치 않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국내 교육시장 어떻게 변하나 : 협상과정에서 대학교육의 개방폭이 확대돼 외국대학의 진출

이 실질적으로 가시화될 경우 경쟁력이 떨어지는 국내 대학들의 도태 등 대학교육의 질적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술계와 예·체능계 전문학원, 외국어학원 등 성인교육 시장의 개방이 명문화된다. 이로써 교육 소비자의 선택의 기회가 넓어지고 전반적인 교육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 외국에 직접 나가지 않고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용학원·디자인학원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국내에서 이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현재도 국내법상 학원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인가제가 아니라 허가제로 돼 있어 설립이 어렵지 않지만 양허한 제출을 통해 공식적으로 개방이 이루어질 경우 국내 진출 외국계 학원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형식적 개방은 효과 반감 : 국내 대학의 경우 정부안대로 제한이 가해지면 당장은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영리법인의 대학설립과 이익금 송금을 허용하지 않고 서울·경기지역에는 원천적으로 대학을 세울 수 없는 등 국내법상의 제약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런 상황에선 어떤 외국대학도 국내에 들어오려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일부 교육전문가들은 양질의 외국 교육서비스가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보다 제한을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제도화하는 등 개방폭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학술연구조성 2천270억 원 지원

기초학문 육성과 우수연구자 발굴·지원, 지방대학 발전 등 학술연구기반 조성사업에 2천270억 원이 지원된다.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학술연구재단은 3월 23일 이와 같은 내용의 '2003년도 학술연구조성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4월부터 10월까지 3차에 걸쳐 21개 지원분야별로 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지원분야는 기초학문 육성과 공동연구과제 지원, 우수연구자 지원, 대학원 연구력 강화, 지방대 육성과제 지원, 우수학술단체 지원 등 6개로 나뉘며 사업공모는 분야별 세부과제 단위로 이뤄진다. 분야별 지원금액은 기초학문 육성이 1천293억 원으로 가장 많고 공동연구과제지원 427억 원, 우수연구자 지원 310억 원, 대학원 연구력 강화 110억 원, 지방대 육성 70억 원, 우수학술단체 지원 66억 원 등이다. 세부사업별로는 기초학문육성의 인문사회 지원이 920억 원, 기초과학지원 292억 원이며 협동연구과제 지원의 중점연구소 지원 275억 원, 우수연구

자 지원의 선도연구자 지원 163억 원, 대학원 연구력 강화 110억 원, 지방대육성과제 지원 70억 원 등이다.

사업공모는 기초학문육성의 인문사회 분야가 4월 8일부터 신청을 받는 것으로 1차 공모가 시작돼 11월 말까지 계속된다. 지원자격과 주의사항 등 자세한 내용과 공모 신청양식 등은 학술진흥재단 홈페이지(www.krf.or.kr)를 참조하면 된다. 학술진흥재단 관계자는 "올해는 기초학문의 안정적인 지원과 지방대학 교수 연구비 지원 확대 등에 중점을 두었다."며 "연구자 중심의 지원시스템을 마련하고 예비계획서 심사제도 도입 등을 통해 심사절차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개선하였다."고 말했다.

### ☪ 대학 평생교육원 정규과정 전환

대학 내 비정규과정인 부설 평생교육원 등을 정규과정으로 전환하는 성인학습과정이 도입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월 23일 이르면 올해부터 정규 학제에 따른 교육기회를 놓친 만 25세 이상의 성인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대학에 자격취득 위주의 성인학습과정을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제도는

현재 운영 중인 학점은행제 등과 교육내용이 비슷해 자칫 학생모집난으로 재정에 어려움을 겪는 일부 대학들의 학위 장사로 악용될 소지가 많아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성인 학습과정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지방전문대에서 시범실시한 뒤 4년제 및 수도권지역 대학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성인학습과정은 정규과정으로 해당 대학 총장으로부터 학위를 받을 수 있어 졸업 후 4년제 대학으로의 편입도 가능하게 된다. 이 과정은 교육인적자원부의 평가인정을 받지 않고 대학 학칙만으로 설치할 수 있고 학생 선발도 대학 자율에 맡겨져 상당수 대학이 이 과정을 설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인적자원부 집계 따르면 2001년 말 현재 전국 289개 대학(전문대, 기능대 등 포함)에 교육원 299개(교육생 32만 180명)가 있으며 대학 부설 전산원은 3개(교육생 7만4540명)에 이른다. 그러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일부 대학 부설 교육원은 부실하고 프로그램이 낙후되어 정규 과정으로서의 학습에 문제가 있는데다 대학총장 명의의 학위 남발도 우려되고 있다. 한 대학 관계자는 "성인학습과정이 대학 관관을 얻기 위한 또다른 방편으로 악

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도입된 지 3~4년밖에 안된 현재의 학점은행제나 독학학위제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행 초기 부작용을 막기 위해 지방 소재 전문대에서부터 시범운영하는 한편 수도권은 만 28세 이상, 지방은 만 25세 이상 등으로 입학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 고3 수능 모의평가 6월, 9월 실시

2004학년도 대학입시에 대비한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가 오는 6월과 9월에 고3과 고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월 25일 올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시·도 교육청이 주관하는 전국 연합학력평가를 고3은 모의수능 2차례 등 모두 5회, 고1, 2는 각 2회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중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6월 11일과 9월 2일 학력평가는 모의수능으로 치러지며 고3과 졸업생들에게 응시 기회가 부여된다. 또 전국 1천670개 고교 3학년 47만 7천 693명이 참여하는 올해 첫 고3 학력평가가 오는 27일 서울특별시교육청 주관으로 시행되며, 그 외의 고3 학력평가는 4월 24일 경기도교육

청, 10월 1일 서울시교육청 주관으로 실시된다. 고1 학력평가는 6월 11일과 12월 4일 서울특별시교육청 주관으로 실시되며 고2 학력평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주관으로 6월 11일과 교육과정평가원 주관으로 12월 4일에 2005학년도 수능 예비평가로 치러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개인별 총점과 총점 석차는 산출하지 않고 학생 개인별 성적표(영역별원점수와 표준점수, 변환표준점수, 변환표준점수에 의한 백분위 점수, 영역별 등급, 종합등급)와 담임용 성적일람표, 교과 담임용 문학분 석표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학력평가 문항을 교교 현직 교사로 구성된 출제본부가 수능과 같은 형태로 출제해 수능에 대한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 ● 대통령 업무보고 주요 내용

4월 9일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통령 업무보고는 고등교육기관 경쟁력 제고를 비롯해 사교육비 경감, 지방대 육성, 교육부 자체 혁신에 이르는 교육현안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그러나 보고내용 중 상당 부분이 과거에도 제기된 적이 있고 예·체능 평가방식 개선과 교사회·학부모회 법제화, 대학퇴출경로 마련 등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은 대부분 연구·검토 과제로 돌려 참신성과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고등교육정책 및 지방대 육성: 대학 교육·연구 역량 확대를 위해 국제경쟁력이 있는 분야의 대학원과 연구소를 집중 지원하고 학문분야별 평가를 위한 민간평가전문기관 인증제, 대학제정지원사업 등을 평가할 상설 평가기구 설치 등을 추진한다. 또 대학 간 M&A(인수·합병) 등 특성화를 위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경영능력이 없는 대학은 스스로 문을 닫을 수 있도록 법적인 퇴출 경로를 마련한다. 지방대 육성을 위해 현재 3천억 원 수준인 지원 규모를 1조 원까지 확대하고 지방대가 권역별·영역별로 특성화하고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 BK 21' 사업을 도입,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지원한다. 지역 내 대학 간 교수 및 학사 교류 활성화와 산학협력체계 도입 등으로 산학협력의 유연성을 확보하며, 지방대 육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중앙단위에 '인적자원개발회의'를 설치·운영하고, 지역단위로 '지역혁신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사교육비 경감: 전체 사교육비 중 52%가 초등과정에 쓰이며 이중 41%는 예·체능 교육비로

사용된다. 이런 사교육비를 학교 내로 최대한 흡수하기 위해 특기적성교육을 활성화하고 예·체능 평가 방법을 서열식이 아닌 서술식 등 다른 다양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 내신성적을 위한 예·체능 과외비를 줄여 나갈 계획이다. 또 교육과 보육이 통합된 유치원 종일반과 같은 에듀케어(Edu-Care) 시설을 확대하고 초등학교 저학년대에 대한 방과후·방학 중 학교 내 보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교육부는 5월 중 '사교육비 경감 대책 연구팀'을 구성, 실태조사를 통해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장·단기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연말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참여교육 실현: 초·중등학교의 교사회, 학부모회 법제화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하고 학교운영위원회 기능을 활성화하며 지역교육청에 주민과 학부모 등으로 '지역교육발전협의체'를 구성,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시·도교육청은 기획기능, 지역교육청은 학교지원 기능 위주로 개편하고 지역특성에 따라 일반계 고교 관찰권도 교육감에서 교육장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대학 또한 총장에게 집권된 의사결정권을 이사회, 교수회 등으로 분산하는 민주적 의사

결정기구를 마련하고 국·공립대 총장 선출제도는 대학 구성원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유도한다. 사학의 비리와 분규를 막기 위하여 사립대 및 법인의 재정에 대한 회계감사를 회계법인 등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해 실시하고 사학비리 감사 전담기구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

◆초·중등교육정책: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능력과 책무성 중심으로 교원 인사제도를 혁신한다.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 부진학생 책임지도, 인성교육 강화 등을 추진하고 의무 및 무상교육 확대를 위해 체험학습비 및 급식비 등을 지원하며 실업계 고교 학비지원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계층간·지역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농어촌 교육 종합발전방안 및 도시 저소득지역에 대한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며 유·초·중·고교 학급당 학생 수를 2008년까지 30명 이하로 줄인다.

◆교육인적자원부 혁신: 대학을 포함한 학교교육 관련 기능은 학교, 시·도교육청 또는 지역교육청에 최대한 이양, 위탁하고 각

중 규제적 행·재정 지침은 전면 폐지한다.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에 '국민참여교육센터'와 같은 쌍방향 의사소통 채널을 만들어 교육 당사자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 정책에 반영한다. 직위공모제와 교육행정 직렬 폐지 등을 통하여 개방적 인력 충원을 모색한다. 직위공모제는 실·국장 10개 직위 중 2~3개, 과장 31개 직위 중 5~6개 등 주요 보직 20%에 우선 도입하며 행정자치부에 공무원 임용령의 교육행정 직렬 폐지를 건의한다. 교육부 직제를 현재 정원 내에서 5월 초까지 마무리한다. 기획관리실이 기획과 홍보기능을 맡고 학교정책실 중심으로 교육자치지원국을 연계시켜서 장학기능과 행정지원 기능의 연계성을 높이며 차관보가 인적자원정책을 총괄하도록 업무를 조정한다.

### ☞ 지역산업 석·박사 장학금

#### 사업 경쟁률 7대 1

정부가 비수도권 이공계대학을 대상으로 신설한 '지역전략산업 연계 석·박사 연구장학금 지급 사업'이 7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보였다. 4월 8일 한국산업기술재단에 따르면 최근 이 사업의 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 80개 대학에서 1천여 개의 지역기업과 연계해

709건의 지역전략산업 연구과제를 신청했다. 이는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의 121개 대학 가운데 70% 가까이가 신청한 것으로, 올해 지원대상 과제가 100건인 점을 감안할 때 경쟁률이 7대 1을 넘는 것이다. 이 사업은 지역전략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과제를 발굴하고 지방 이공계 대학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산학협동 연구팀 100개를 골라 해당 과제에 참여하는 석·박사 과정 학생에게 연구장학금이 지급된다. 사업주관기관인 산업기술재단은 5월 10일쯤 100건의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 ☞ 두뇌한국 신규사업팀 39개

#### 대학 127개 팀 선정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학술진흥재단은 두뇌한국(BK) 21 신규사업팀으로 전국 39개 대학 127개 팀을 선정, 앞으로 3년간 각 7천만 원~2억 원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신규사업팀 공모에는 총 63개 대학 580개 팀이 신청하여 5대 1의 비교적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학교별로는 성균관대가 16개 팀으로 가장 많이 선정되었고 포항공대·연세대 각 8개, 인하대·경북대 각 7개, 서울대·경희대·이화여대 각 6개, KAIST·부산대 각 5개, 부경

대·조선대·한양대 각 4개, 고려대·광운대·대구대 각 3개 등이다. 학문분야별로는 공학분야에서 41개 팀이 선정됐고 자연과학 33개, 사회과학 24개, 의·약학 11개, 농·수·해양학 8개, 인문·어문학 6개, 예술·체육학 4개 등이다. 학문분야별 지원액은 공학분야가 71억 4천만 원으로 가장 많고 자연과학 48억 1천만 원, 의·약학 19억 1천만 원, 사회과학 16억 5천만 원, 인문·어문학 3억 6천만 원, 예술·체육학 2억 4천만 원 순이다.

### ☞ 지방대학에 7년간 350억 원 지원

경상남도가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내년부터 매년 50억 원씩 특성화 학과 육성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도는 지방분권의 핵심사항인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도내 산업고도화와 밀접한 대학별 특성화 사업 및 이공계 대학 중 전국 상위수준의 학과에 내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50억 원씩 35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4월 12일 밝혔다. 도는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창원 부곡에서 대학 기획연구·산학협력차장과 기업체 사장, 연구원 등 2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지방대학 육성 워크숍에서 이 같이 밝히고 도와 대학이

공동대책을 세워 나가기로 했다.

## ☪ 사이버 교과목 개발에

### 12억 원 지원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 사이버 대학의 운영과 내년도 봄학기 교과목 개발에 12억 원을 지원키로 하고 이에 참여할 대학을 모집한다고 4월 13일 밝혔다. 정보통신부는 사이버 교과목 개발과 운영에 참여하는 대학에 개발비로 신규 교과목의 경우 교과목당 3천 7백만 원을, 업그레이드의 경우 1천 5백만 원을 각각 지원하고 운영비로 한 학기에 교과목당 4백 5

십만 원씩을 지원한다. 사이버 교과목 개발에 참여하려는 대학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홈페이지(it-human.or.kr)에 접속, 사업신청서 양식을 내려 받아 내달 10일까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 ☪ 국립대에 한의과대학 설치 추진

국립대학교에 한의과 대학이 설치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4월 14일 한의학계에서 국립대학교 내 한의과 대학 설치를 강력히 요청해 와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전국 주요 국립대들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한의학계에서 서울대학교에 한의과 대학을 신설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해 (서울대측과) 협의 중”이라면서 “그러나 서울대의대가 반대하고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방 국립대학교 중에는 한의과 대학 유치를 희망하는 곳이 있다.”면서 “보건복지부로서는 우수한 국립대학교에 한의과 대학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